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시총회
| 자 료 집

일시_ 2021. 2. 25(목) 19시

장소_ 온라인 줌

 한국성폭력상담소

총회 회순

의장 : 이명숙 이사장

● 인사말	이명숙 이사장, 김혜정 소장
● 성수보고	
● 개회선언	의장
● 서기선출	
● 회순채택	
● 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
● 안건	①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② 회원 처분의 건
● 의사록 승인 절차 안내	
● 폐회선언	

자료 목차

임시총회 정회원 명부		2
임시총회 제안 배경 및 취지		3
보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평가 및 설명(안)	4
안건 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8
안건 2	회원 처분의 건	11

2021년 임시총회 정회원

No.	이름	비고
1	강남식	
2	곽옥미	
3	권지연	
4	김강자	
5	김다미	
6	김두나	
7	김보화	
8	김복연	위임
9	김신아	
10	김여진	
11	김윤희	
12	김은아	위임
13	김주아	
14	김지영	위임
15	김현지	
16	김혜경	위임
17	김혜정	
18	김효진	
19	나선영	
20	노선이	
21	노주희	
22	류수민	
23	문미라	위임
24	문숙영	위임
25	문효진	
26	박미숙	
27	박부진	위임

No.	이름	비고
28	박아름	
29	박아름	
30	박은진	
31	박지희	
32	배순희	
33	백미순	
34	변혜정	
35	서민자	
36	신은재	위임
37	안분순	위임
38	안효선	
39	양현경	위임
40	유미란	
41	유승진	
42	유호경	
43	윤경진	
44	이경환	
45	이나영	
46	이명선	
47	이명숙	
48	이미경	
49	이어진	
50	이영희	위임
51	이윤상	
52	이향심	
53	이혜정	
54	이효린	

No.	이름	비고
55	임순영	
56	장광미	
57	장다혜	
58	장수경	
59	장윤경	
60	장윤정	위임
61	장주리	
62	전순유	
63	전혜영	
64	정정희	
65	정지은	
66	조은희	
67	조인섭	
68	조인옥	
69	조중신	
70	천정환	위임
71	최란	
72	최보원	
73	최지나	
74	탁수정	
75	한소망	
76	한희경	
77	허복옥	
78	홍순기	
79	황지성	

임시총회 제안 배경 및 취지

오늘 진행되는 2021년 임시총회는 지난 1월 28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및 전달 사안에 대한 특별보고에 이어 상담소의 평가와 성찰, 관련 회원 처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내부의 입장과 평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기록과 논의를 여러 차례 해왔으며, 이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유하고 정회원분들의 질문에 답하며, 책임감있게 이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및 전달 사안에 함께 평가하고 성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성폭력 운동 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현재 발생한 상황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선택과 전략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평가를 지속해 나가야한다는 운동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임시총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는 상담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숙고와 논의의 장입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뤄질 다양한 논의와 평가들은 관련 회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과 운동적 차원의 책임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고 무거웠고 어려웠습니다. 정회원 한분 한분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0년간 총 두 차례밖에 없었던 임시총회라는 긴급한 조직체계를 작동하여 이 논의를 힘겹게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반성폭력 운동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운동의 원칙과 활동의 의미를 성찰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위한 조직의 과제로 이 사안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정회원분들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들은 2021년 지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2022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보고되고 평가되고 점검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점검하고 정비하며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상담소의 정체성과 역할, 방향에 입각한 정회원분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숙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반성폭력운동 조직의 책임을 다해가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

※ 이 문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사건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의 평가를 중간과정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정회원들과 나누고, 평가와 성찰을 깊이 하고자 공유합니다. 완성된 문서가 아니며,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임시총회에서의 논의와 평가를 위해 정회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선진적인 성차별·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시했던 서울시는 내부의 성차별·성폭력 문화를 드러냈습니다. 시민사회와 진보를 말하던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실명 공개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임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연쇄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 여성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요청 받은 직후 관련 정보가 여성단체 대표를 통해 유출되고 여성운동가 출신 국회의원과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상담소는 성차별에 맞서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 권리와 비밀보호, 상담지원 등의 원칙을 엄수해야 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그것도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여성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당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으로서 여성과 약자 옆에 서서 정치의 역할을 재구성할 책임을 갖고 있었으며, 또 당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 역시 담당하고 있던 국회의원이 해당 정황을 서울시 젠더특보에 전달한 것, 시장의 젠더감수성 및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하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여성단체에 사건 지원 정보를 묻고, 얻은 정보를 성폭력 사건 가해자/행위자로 지목된 정황을 인지할 수 있던 상태에서 전 서울시장을 위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단체의 피해자 지원 정보가 가해자 측에 전달된 경로가 여성단체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사과드립니다.

상담소는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 유출, 전달된 상황을 초기에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보호, 진실규명과 책임추구의 과정이 모두 중단되리라 우려해서 공유의 범위를 제한했고 공개를 미뤘습니다.

검찰 발표 이후 많은 여성운동가와 여성단체, 지지자들이 질책을 받으며 책임과 부담을 지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초기에 상황을 밝히거나, 공유, 평가, 대안을 함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상담소 내부에서도 중요한 초기 결정과 판단이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못한 점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여성운동의 자성 및 개선’이라는 과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는지 평가합니다. 여성단체 대표를 통한 유출과 여당 의원, 젠더특보에게로의 전달 외의 유출 경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을 기대했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여성단체의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전달’을 밝히고,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이 작동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여성단체 활동가, 오랜 여성운동가였던 여당 국회의원, 상담소 활동가 출신 젠더 특보가 맺고 있던 관계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서울시장이 가해자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 정보의 유출과 전달의 경로가 되었습니다.

여성운동가의 정부기구, 정치권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가 출신 정치인, 공직자들이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고 책무를 하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상담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하고 대응해왔는지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연대해온 피해자와 지지자, 동료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질책이나 요청이 있다면 귀담아듣고, 활동가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더 나은 피해자 지원과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단체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고 피해자를 안전하고 적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건지원자,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업무 배분 및 상호보완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존의 규범과 익숙했던 가치에 의존해왔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균열이 일어난 지금을 위협과 위협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성장의 계기로 바라보겠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당,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비정부 시민단체이자 독립적인 여성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 역할과 정체성, 지속 가능성을 다시 힘 있게, 건강하게, 대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거대 권력을 가진 가해자 또는 집단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와 연대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여성주의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알리고, 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더 온 힘을 다해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권력에 저항하면서,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가고자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체성, 역할, 방향에 입각하여 함께 무겁게 깊이 논의하고 숙고해주시는 정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2020년 7월 9일 피해자 면담 이후, 현재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사무국을 맡고 있음.

○ 2020년 7월 7일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요청받은 본 상담소 소장은 상담소 단독지원보다 공동지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음. 이미 다수의 위력성폭력 사건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대표에 만남을 제안하여, 7월 8일 아침 만나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의논하고 세 단체 대표가 변호사와 만날 일정을 조율함.

○ 검찰수사 결과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20년 7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여성단체가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다는 점 등을 통화에서 전달했고, 해당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했던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곧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함.

○ 초기지원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부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들은 유출경로를 2020년 7월 8일 알게 되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게 '이 사건 관련 논의나 역할, 정보로부터 배제함'을 통보함.

○ 전 서울시장이 7월 10일 사망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위기 상황이 되고, 5일장, 인터넷에서의 피해자 색출 등이 이루어짐. 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2020년 7월 13일 기자회견 개최함. 사건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망으로 왜곡되거나 묻혀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음.

이 때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를 통한 유출과 전달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자 전 서울시장이 사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인지 매우 문제적이라고 발언함. 초기지원자들은 당시 상황상 확인된 유출 경로 외에도 서울시장에게 정보가 전달되었을 다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음. 초기 지원자들이 알게 된 유출-전달의 한 경로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해결과정을 도모하기로 함.

○ 2020년 7월 16~17일, 초기 지원자들은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에게 여성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통한 유출 상황을 공유함. 피해자변호사와 피해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함.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상담소는 여성운동 내부로부터도 “○○○ 변호사와 함께한다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단체만 지원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명명백백하지 않을 수 있다” 등의 공격과 비난을 들음. 피해자를 공동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상담소는 지원 단위를 확대해 사회적 관심과 연대, 참여를 확장하고자 함.

○ 3개월의 시간이 걸려 공동행동 출범을 앞둔 2020년 10월 12일, 초기 지원자들은 공동행동 집행위원회가 될 8개 단체의 대표들에게 이제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 사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앞으로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공유함. 8개 단체 대표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공식적으로 상임대표 징계 및 이 사안에 대한 평가, 근본적인 평가와 혁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이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에게 전달하였음.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실무임원회의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상임대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

○ 초기지원자 4인은 10월 23일 각 단체 상근활동가 전체에게 처음 ‘여성단체 피해 지원 관련 정보 유출 및 전달’ 사안에 대해서 공유함.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되,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징계 등 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함.

○ 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서 11월 말부터 대표가 아닌 실무자 전체 회의에서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유출, 전달 건’ 문제를 다루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반드시 상임대표 사임이 아니라 불신임안을 의결해야 함을 강조함.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하였고, 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이자 이 사건 피해자지원단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함. 상임대표 불신임안과 혁신위원회 구성이 가결됨.

○ 2020년 12월 30일 검찰 발표와 언론을 통해 ‘여성단체의 사건지원 정보 유출, 전달 건’이 알려짐. 여러 여성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과정에 대한 돌아보기와 비판, 성찰도 진행됨.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2021년 1월 7일 온라인 회의에서 130여명이 참여하여 공동행동 참여 단위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검찰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점에 대해 비판하고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유출, 전달’ 사실을 규탄하며, 단호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함. 이를 받아 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과정을 평가하고 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이 사안에 대한 상근활동가 평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평가 과정에 대한 보고 및 임시총회 개최 제안을 하였고, 2월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평가와 성찰, 향후 운동 방향, 원칙과 실행방안 모색, 관련 회원 처분 논의를 제안하고, 준비해 옴.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1. 성폭력 사건 지원 공동대응활동 평가 및 원칙 마련

○ 필요성 및 문제의식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의 지원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본 상담소의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해나감에 있어 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을 비롯하여 지난 공동 지원 및 대응 활동 방식을 성찰 및 평가하고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 활동에 대한 상담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정리하여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의 원칙을 마련함.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지원 및 반성폭력운동의 원칙을 상기와, 내부적으로는 공동대응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후속 활동가에게 전수함. 가이드라인에는 공동대응 활동의 특성, 구성 과정, 상담소 내 인력 배분, 활동 공유 및 논의 방식, 활동가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공동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모색함.

- 주요 쟁점 및 내용

1)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

: 어떤 사안이 공동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 제안하거나 참여할 것인지 초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초기에 공동대응을 결정하고 세팅하는 시기에 확인해야할 조건, 환경, 정보공유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함.

2) 피해자 및 사건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

: 높은 정보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지만 상담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함.

3) 공동대응 사안에 대한 상근활동가의 역할, 태도, 권한

: 사건 지원 및 공동 대응을 직접 담당하는 활동가들에게 책임과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다른 활동가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함. 나아가 상담소 윤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성폭력 사건 지원에 대한 상근활동가로서의 태도와 윤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함.

: 대표단이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성으로 인하여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며 의견 수렴에 취약할 수 있음. 권한과 노하우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를 지원자가 통제하기 어렵고 긴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담당활동가가 적시에 공유하기 어려워짐. 그럼에도 주요 사안에 대한 공유, 논의, 결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논의함.

4) 공동대응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마련

: 공동대응 활동에서 피해자 지원의 노하우가 어떻게 다른 활동가들에게 공유되고 후속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담당 활동가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여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마련함.

5)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의 논의 체계와 책임

: 공동대응 활동의 주요 상황, 쟁점, 의제, 일정 등은 상근자회의에서 공유 및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을 언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개별 활동가들의 경험과 판단에 따르고 있기에, 공동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긴급한 사건지원에 대한 논의체계가 상근자회의와 별도로 있을 수 있을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함.

: 상근활동가회의 외에 자문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지원에서 단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공유하고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 점검함.

○ 실행 방안 및 일정

1) 상근활동가 내부 토론 진행

2)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등 타 단체들과의 내부 간담회 진행

3) 상담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임시총회, 각 팀 자문회의 및 상담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4) 성폭력 사건 지원 공동대응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도 총회에서 보고 및 공유

※상담원 윤리규정 제정(30주년 TF 규정팀)사업,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공동대응사안 원칙과 지향 논의 활동과 연동하여 진행

실행 방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상근활동가 내부 토론												
타 단체들과의 내부 간담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가이드라인 제작												

2. 여성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 권력/자원/원칙의 방향 모색

○ 필요성 및 문제의식

여성운동의 결실로 인하여 현장의 경험과 관점을 견지한 여성단체활동가가 정계나 정부 조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졌음. 상담소는 30년의 활동 역사를 가진 만큼 전 활동가나 자문위원, 이사가 정계나 정부조직에서 역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공공의 의제를 함께 목소리 내고 협업하기도 하며 제도권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내줄 수 있는 여성정치인과 교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성운동이 가진 자원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이번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정보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정치권과 운동권이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성운동단체가 시민단체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여성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이에 여성운동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여성의 정

치세력화에 힘쓰는 한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운동, 여성운동단체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에 맞서는 대항 권력과 자원을 확장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론장에서 토론될 필요가 있음.

○ 실행 방안 및 일정

실행 방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여성운동단체 간담회/토론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안건2. 회원 처분의 건

○ 안건설명

1. 사건개요

1) 내부에서 확인된 경위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본 상담소는 피해자의 고소 이전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목도함
- 본 상담소의 소장은 2020. 7. 7(화) 오후 2시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여성단체 지원 요청을 받고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해온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만남을 요청함
- 2020. 7. 8(수) 오전 8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 3인의 미팅에서 서울시장이 가진 위력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 면담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2020. 7. 8(수) 해당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 40분경, 본 상담소 정회원이자 운영자문위원이며 당시 서울특별시 젠더특보였던 임순영 회원이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변호사를 만나는가, 무슨 일인가”라고 물음. 본 상담소 소장은 (약속을) 어떻게 알았나? 말해줄 수 없다고 밝힌 후 전화를 끊었음
- 2020. 7. 8(수) 밤 10시 40분경, 임순영 회원은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나, 낮에 여성단체 만났나, 좀 알려달라”고 함. 본 상담소장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함
- 2020. 7. 9(목) 오전 7시경, 임순영 회원은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지, 기자회견을 하는지, 법적 조치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본 상담소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후, “관련인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문자 발송

2) 검찰 수사 결과 내용

- 2020. 12. 30(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결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김영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남인순 의원, 본 상담소 후원회원)과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전 서울시장은 위 특보, 임순영 회원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음
- 남인순 의원은 2020. 7. 8. (수) 오전 10시 31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통화 직후, 임순영 회

원에게 10시 33분 전화하여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말함

- 임순영 회원은 2020. 7. 8 (수) 낮 12시 21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로부터 “여성단체가 000 변호사(피해자의 4월 성폭력 사건 변호인)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일 오후 3시경 전 서울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고 물음
- 같은 날 임순영 회원은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밤 11시까지 공관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관에 가기 전인 밤 10시 43분경,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나, 낮에 여성단체들과 만났냐 좀 알려달라고” 물음
- 당일 서울시 내부 대책회의에서 임순영 회원은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음
- 2020. 7. 9(목) 오전 7시 9분경 임순영 회원은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고소 등)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고 물음

2. 안건 제안 내용

1) 임순영 정회원과 관련한 부분

- 임순영 회원은 2019. 1.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지방부이사관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음. 젠더특별보좌관은 시장의 젠더 분야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직위로 신설된 직책임
- 본 상담소 내부에서 확인한 경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순영 회원은 2020. 7. 8(목) 밤 11시에 이뤄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인 2020. 7. 9(목) 아침에도 본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대응상황 혹은 단체의 지원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임순영 회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의 기본 원칙인 비밀보호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의 대응 수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이는 대책회의 및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전달함. 전 서울시장의 가해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에서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상사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전달한 것은 반성폭력 운동단체인 상담소에 치명적인 문제를 낼 수 있는 행위이며,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 이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임

2) 남인순 후원회원과 관련한 부분

- 남인순 후원회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입법기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최고위원)임

- 남인순 의원은 2020. 7. 8 오전 10시 31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통화한 후 오전 10시 33분 서울시 젠더특보인 임순영 회원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함
-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어느 여성단체가 어느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 약속을 알게 된 후 남인순 의원과 연락함. 남인순 의원은 상임대표와의 2분 가량 통화에서 전 서울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성격의 사안으로 파악함. 여성단체 대표에게 들은 사안이 부적절한 정보 전달, 문제적 유출임을 인지했을 것임에도, 남인순 의원은 곧바로 전 서울시장 특별보좌관에게 연락하였음. 이후 전 서울시장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확인과 대처를 하게 됨
- 남인순 의원은 2020. 7. 사건이 알려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위원장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함. 이러한 명명은 해당 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피해와 피해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의심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기제가 되었음

3) 임시총회 공고시 제명안 제안 취지

- 3선 서울시장이자,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으로서 전 서울시장인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피해 사실에 대한 규명과 사회적 인정을 멀게 해왔고, 유례없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변호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짐
-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식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의 권리보장 및 보호는 여성주의 운동의 중요한 원칙임. 어떤 사회 단위와 집단에도 젠더의식과 위계, 위력이 존재하므로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 때 여성운동가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구조적 위력 속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해석하고, 사안 회피나 축소가 아닌 구조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위치여 왔음
- 여성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특별보좌관이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폭력 가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상태의, 자신과 가까운 정치가 측에 전달하고 그를 위해 더 정보를 얻고자 한 행동은 여성운동에 대한 신뢰를 실추케 하고 상담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
- 본 상담소 현재 정관상으로는 회원에 대한 평가, 징계, 처분 관련 규정이 제8조 2항 ‘제명’으로만 존재하고 있음. 정관과 총회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조치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논의한 결과, 현재 규정에 따라 정회원 논의,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제명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함
- 본 상담소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명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운동 출신 국회의원, 시장 보좌관을 통해 여성단체의 피해 지원 정보가 유출·전달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본 상담소의 중간 평가와 설명을 말씀드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논의하고자 함
- 향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성폭력 사건에서, 여러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연결하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연대를 더욱 명확히 만들어가고자,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안을 엄중히 논의하고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회를 통해 임시총회에 상

정하였음

○ 근거규정

<p>정관 제 2 장 회 원</p> <p>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p> <p>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p> <p>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정회원: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p> <p>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p> <p>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p> <p>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p> <p>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p> <p>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p> <p>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p> <p>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p> <p>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p>
--

4) 당사자들의 소명 : 임시총회 개최공고 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당사자 소명의견 제출을 요청함

임순영 정회원 소명 - 원본 줌회의 화면 공유 및 의장 대독

남인순 후원회원 소명 - 원본 줌회의 화면 공유 및 의장 대독

5) 회원 처분의 건 논의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1월 28일, 2월 10일 회원 처분의 건을 명시한 임시총회를 공고함
-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임순영, 남인순 회원에게 소명의견 제출을 요청함
남인순 회원은 2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힘
임순영 회원은 2월 23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힘
- 위와 같은 소명의견과 탈퇴의사에 대해서 현행 정관상 자유로운 탈퇴 의사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임순영, 남인순 회원의 2월 17일자, 2월 23일 자발적인 탈퇴를 확인함)
- 회원 처분, 회원 제명에 대한 안건 상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본 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서 논의함
- 정관상 제명 뿐 아니라 회원의 권한과 책임을 다양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징계성 조치와 자발적 탈퇴가 병존할 경우, 징계를 단순 회피하기 위한 탈퇴가 예상되므로
징계성 조치 절차가 시작될 경우 자발적 의사에 의한 탈퇴 보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